

공공AI 확산에 기본권 침해 ‘우려’… 가이드라인 마련 시급

지자체 중심 스마트시티 가속화
개인정보 처리 기준 등 명시 안 돼
법 개정에도 제도 실효성 한계

인공지능(AI) 기술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이를 통제하고 조율할 제도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스마트시티 등 공공 영역의 AI 도입이 현실화되면서, 정부는 뒤늦게 환경영향평가와 개인정보 보호 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11일 〈메트로경제신문〉취재에 따르면, 공공 영역에서 AI 기술이 본격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환경영향평가 및 개인정보 활용 지침이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아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잇따라 도입 중인 스마트시티 등은 광범위한 지역의 데이터를 수집·처리하는 고위험 AI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기준 없는 AI 활용은 곧 개인의 기본권 침해로 곧장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스마트시티는 사물인터넷(IoT)과 AI 기술을 결합해 도시 서비스의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시민 삶의 질을



스마트시티 등 공공 AI는 폐쇄회로(CC)TV 등 광범위한 AI 비전 센스를 이용하는 만큼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높다. 위 이미지는 네이버가 사우디아라비아 현지에서 구축, 운영 중인 디지털 트윈 플랫폼 ‘KSA 디지털 트윈 시스템’의 모습. /네이버

향상시키는 새로운 도시 모델이다.

실제로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스마트시티 기반의 AI 시스템 도입도 가속화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최근 카오엔터프라이즈와 함께 도시 데이터를 수집·활용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플랫폼을 구축했다.

이 플랫폼은 재난 예방, 시설물 관리 등의 공공 서비스를 데이터 기반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AI 학습 모델 생

성·검증 기능까지 포함돼 있다. 그러나 해당 사업에는 개인정보 처리 기준, 정보주체 통보 여부, 자동화된 결정 구조에 대한 설명은 별도 명시돼 있지 않다.

정부는 최근 공공 AI 활용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AI 전반을 다루는 ‘인공지능기본법’을 제정해 AI 관련 추가 입법과 제도 도입 배경을 마련했다. 2026년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기본법은 고위험 AI 기술에 대해 안전성, 투명

성, 영향평가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하위 법령 마련을 위해 ‘AI기본법 정비단’을 운영 중이며, 고영향 인공지능의 정의와 확인 절차, 세부 평가 기준 등을 마련 중이다.

보다 구체적인 행정 차원의 대응도 추진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공공부문에서 도입하는 인공지능 기술과 서비스가 국민에게 미칠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는 ‘AI 영향평가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대상·지표·평가 방법 등을 마련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게 목표다.

행안부가 추진 중인 영향평가는 단순한 기술 검증을 넘어, 편향성·책임소재·투명성 여부까지 포괄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미국, 유럽연합(EU) 등은 이미 공공 AI에 대한 영향평가와 감시 체계를 도입해 운영 중이며, 행안부는 이를 참고해 국내 적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AI 기술의 공공 도입이 확산되는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기존 법·제도에도 일부 진전이 있었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AI 등 자동화된 시스템이 정보주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릴 경우, 그 결정의 기준과 절차를 설명할 권리, 이의를 제기할 권

리 등을 정보주체에게 보장하고 있다.

예컨대, AI 기반 배차 플랫폼이 알고리즘으로 사용자 계정을 정지시키는 경우, 당사자는 해당 결정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인간의 개입을 통한 재검토와 재결정을 거쳐야 하며, 자동화된 결정 여부를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이 같은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싼 한계는 여전히 존재한다.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판단 기준은 여전히 사례 중심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실무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명확한 해석지침이나 대응 매뉴얼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AI 개발 목적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 역시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최근 국회에 발의된 복수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들은 적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해 일정 요건 하에 AI 개발과 성능 개선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들 개정안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전제로, 공익성과 정보주체 권리 침해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활용을 허용하겠다는 취지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예스24 “개인정보 유출 기록 없었다”

랜섬웨어 해킹으로 접속 먹통
정부 기술지원, 강제성 없어
현행 체계 구조적 한계 드러나

랜섬웨어 해킹으로 인해 지난 9일부터 접속 장애 사태를 겪고 있는 예스24(YES24)가 회원들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음에도 이용자 정보 누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1일 예스24는 ‘회원들의 개인 정보 유출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근거를 묻는 〈메트로경제신문〉질의에 “개인 정보와 주문 정보 등 모든 데이터 파일을 암호화해 보관하고 있었고, (해커들의 침입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로그 기록이 없어 유출이 없었음을 확인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현장을 방문했고, 유출이 없었다는 걸 함께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회사 측은 해커들이 암호화 해제에 요구한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합구했다.

예스24는 사고 발생 후 약 36시간이 지나서야 랜섬웨어 공격 사실을 공개했

다. 그전까지는 홈페이지에 ‘시스템 점검 중’이라는 공지만 게재됐으며, 이로 인해 해킹 사실을 숨긴 것 아니냐는 은폐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예스24 관계자는 “처음에 접속 장애가 있을 때 공지가 자동으로 뜨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었다”며 “랜섬웨어를 확인했을 때 KISA에 바로 신고했고 홍보팀에서 이를 인지하는 데 시간이 걸린 것뿐이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은폐 의도는 절대 아니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고객 불편과 비용이 늘어나는 만큼, 빨리 알리는 것이 회사에도 이롭다”고 말했다.

예스24는 일부 언론 보도에서 제기된 KISA 기술 지원 거부로 사고 조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주장도 적극 반박했다.

회사 측은 “내부에 기술 분석팀이 있는 회사들은 자체적으로 기술 분석을 하고 이후 KISA에서 (회사에) 방문해 조사한다”며 “저희가 기술 분석한 내용을 KISA에 제공해 사건 수습에 적극 협조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예스24의 홈페이지와 앱 먹통 사태로 인해 이

용자 불편은 커지고 있다. 전자책 열람은 물론, 뮤지컬·콘서트 입장을 위한 티켓 확인이나 예매도 불가능한 상태다. 팬사인회 응모, 선예매 일정도 줄줄이 연기되거나 취소됐다.

예스24는 “피해 보상은 무조건 다 한다는 게 원칙”이라며 “콘서트 입장이 안 된다거나, 예매 취소를 못 한다거나 하는 등 케이스가 많아 정리하고 있고, 구체적인 보상안 공개 시점은 현 단계에선 밝힐 순 없으나 최대한 빨리 발표하겠다”고 양해를 구했다.

이번 예스24 해킹 사태는 사이버 공격 발생 시 정부의 기술 지원이 민간 기업의 선택에 맡겨져 있다는 점에서, 강제 조사 권한이 없는 현행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

KISA 관계자는 “기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지원은 할 수 있지만 강제할 순 없다. 기업 요청이 있는 경우 랜섬웨어 취약점 점검을 나가서 컨설팅을 통해 취약점 보안을 돕는다”면서 “기술 지원 기관이어서 정부에 법 개정을 요청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

SK AX, 글로벌 기업지원관리 시장 공략

SAP와 AI ERP 모델 공동개발 협력

SK AX는 전 세계 기업들을 대상으로 ERP(기업지원관리)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SAP와 전략적 협업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양사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SAP의 연례 행사 ‘사파이어(SAPPHIRE)’에서 만나, AI(인공지능) 기반 ERP 혁신 모델을 공동 개발해 확산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업은 단순한 기술 통합을 넘어 ERP 시스템 구조 자체를 AI 중심으로 재정의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를 통해 ERP는 기존 단순 기록·관리 중심 시스템에서, 상황을 인식하고 분석하며 실행을 제안하는 ‘스마트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진화하게 된다.

SK AX는 SAP의 AI 임베디드 ERP와 자사 디지털 AI 기술을 접목해 최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SAP 사파이어 행사에서 SK AX 손건일 엔터프라이즈서비스부문장(왼쪽)과 SAP 마노스 랩토폴로스 최고매출책임자(CRO)가 ‘AI ERP 모델’ 개발에 협력하기로 약속하고 있다. /SK AX

적화된 AI ERP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SAP의 표준 프로세스를 도입하고, ‘클린 코어(Clean Core)’ 원칙을 반영해 시스템 표준화와 유연성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김현정 기자

KT-넷플릭스, ‘K인텔리전스’ 콘텐츠 선봬

韓 애니메이션 영화 활용

KT는 넷플릭스와 뮤직비디오 형식 ‘K인텔리전스’ 브랜드 콘텐츠를 선보였다고 11일 밝혔다.

K인텔리전스는 KT와 대한민국을 뜻하는 ‘K’에 지능이라는 단어를 결합한 KT 신규 인공지능(AI) 브랜드명이다.

뮤직비디오는 넷플릭스에서 처음 선보이는 한국 애니메이션 영화 ‘이 별에 필요한’을 활용했다. 이번 콘텐츠는 기술 중심의 정형화된 메시지 대신 대중적 콘텐츠에 KT 브랜드 경험을 녹이는 데 중점을 뒀다.

영화 ‘이 별에 필요한’은 AI가 일상화된 미래 서울을 배경으로 화성 탐사를 꿈꾸는 우주인 난영과 뮤지션 꿈을 잠시 접어둔 제이의 로맨스를 그렸다. 영화는 지난달 말 공개 직후 넷플릭스 영화 차트 대한민국 3위에 올랐다.

KT 브랜드 뮤직비디오에는 작품 주요 장면과 한지원 감독 신규 작화가 추가됐다.

몸은 화성에 있지만 홀로그램으로 야구장에서 시구하는 여주인공, KT 미래 통신망으로 우주와 지구간 끊김 없는 통화를 나누는 주인공들의 모습 등을 담았다. /김서현기자

‘K-FAST’ 글로벌 확산 위해 민관 팔걸어

얼라이언스 회의에 34곳 참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11일 ‘제1차 글로벌 K-FAST 얼라이언스’ 회의를 열고, K-FAST의 글로벌 확산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K-FAST는

광고를 시청하면 OTT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받는 서비스다.

이번 얼라이언스는 글로벌 OTT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국내 미디어·콘텐츠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민관 협업 체계다. 4월 출범 당시 22개 회원사로 시작했으며, 이후 AI 콘텐츠 현지화 기술 기

업 등 12곳이 추가돼 총 34개 기관·기업이 참여 중이다. 참여사에는 삼성전자, LG전자, 지상파 3사,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이 포함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1차 추경으로 확보된 80억원 규모의 ‘AI 더빙 특화 K-FAST 확산’ 지원 사업 방향을 설명하고, K-FAST의 국제 확산 및 국내 수출기업 광고 매칭을 위한 컨퍼런스 계획을 공유했다. /김서현 기자